



정부 '클린 디젤' 정책 공식 폐기
미세먼지 '주범' 오명에 퇴출 수순
공공 부문 친환경차 구매 100%로
노후차 폐차시 400만원 추가 지원
상반기 신규 등록 전년비 4.4% ↓

디젤차 시대가 저물고 있다. 정부가 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클린 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하면서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디젤차 단계적 퇴출=정부는 최근 열린 '제 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통해 '클린디젤 정책의 공식 폐기'를 선언했다.

공공부문의 경우 오는 2030년까지 '경유차 제로화'를 추진한다. 대체 차종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2020년까지 공공 부문 친환경차 구매 비율을 현재 50%에서 100%로 달성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지금까지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받은 95만대의 경유차에 부여되던 주차료·혼잡 통행료 감면 등 인센티브가 폐지되고 '저공해 경유차 인정 기준'도 삭제한다. 정부는 그동안 유럽연합(EU) 배출가스 기준을 토대로 상대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경유차는 친환경차(저공해 자동차)로 인정해 특혜(인센티브)를 줬지만, 이번 대책으로 특혜를 없앤다.

이명박 정부 당시만 해도 휘발유를 연료로 쓰는 차량보다 연료 효율이 높고 이산화탄소 배출은 오히려 적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디젤 차량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이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영세사업자들의 경유차 이용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1t 트럭을 구매하면 기존 보조금(최대 165만원)에 추가로 400만원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

◇내리막 가는 디젤차=12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신규 등록된 디젤차는 42만329대로, 1년 전 43만9700대보다 4.4% 감소했다.

지난 2015년만 해도 디젤차는 기름값이 싸고 연료 효율이 좋고 이산화탄소 배출은 적다는 점 등이 부각되면서 국내 자동차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2.5%에 달할 정도로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친환경차량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디젤차 비중은 47.9%(2016년)→45.8%(2017년 상반기)→45.2%(2018년 상반기) 등으로 낮아졌다.

수입차도 비슷하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내놓은 '10월 국내 수입차 등록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디젤차 점유율은 42.0%로 지난해 같은기간(48.1%)에 비해 낮아졌다.

반면, 지난해 10월까지 42.2% 수준이던 가솔린차 점유율은 올 10월 현재 48.1%로 올라섰다.

'클린 디젤'이라는 친환경적 이미지로 포장, 인기가 치솟았던 디젤 차량은 2015년 말 디젤 게이트가 터지면서 인기가 급락한데다, 전기차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연쇄 차량 화재 등이 맞물리면서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국내 완성차업체에서도 디젤 모델 생산을 중단하고 가솔린 모델 라인업을 강화하는 등 전략을 수정하는 중이다.

현대차는 그랜저와 쏘나타, i30, 맥스쿠루즈 등 4개 차종의 디젤 모델 생산을 중단했고 'SUV=디젤차'라는 공식에서 벗어난 가솔린 모델 출시와 판매도 잇따르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사람’ 아닌 ‘시스템’도 운전자

정부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자율주행차 분야에 첫 적용

앞으로는 '사람'만 운전자가 아니다.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시스템'도 운전자가 된다.

정부가 최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신산업 특성을 고려한 규제 접근법으로, 신기술의 전개 양상을 미리 내다보고 예상 규제이슈를 발굴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전 선제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자율주행차 분야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시범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게 된 데는 ▲연평균 41%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ICT 융합 신산업이라는 점 ▲제작안전·교통·보험·통신보안 등 다양한 규제이슈가 포함된 점 ▲구체적 상용화일정 등 단계적 발전 양상 예측이 가능한 분야라는 점이 반영됐다.

정부는 22개 기관이 참여해 운전주제, 차량·장치, 운행, 인프라 등 4대 영역에서 단기 15건·중기 10건·장기 5건 등 30개 규제이슈를 발굴하고 이슈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단기과제부터 우선 추진하고 2020년께 로드맵을 재설계한다.



먼저 운전 주도권이 시스템에 있고 필요할 때 운전자가 개입하는 수준의 '조건부 자율주행' 단계에 맞춰 내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한다. '운전자' 개념을 자율주행차에 맞춰 재정의해 각종 의무와 책임 부과 주체를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시스템 관리 의무를 의무화하고 검사·정비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 및 행사책임 기준도 명확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보행자의 영상정보 수집·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방법 개정도 추진한다.

/김지을 기자 dok2000@

한국형 '레몬법' 소비자 권익 보호할까

내년부터 새 차 고장 반복 났을 교환·환불제 시행

내년 1월부터 새로 산 자동차에서 반복적으로 고장이 발생하면 차를 교환·환불받을 수 있는 일명 '레몬법'이 시행된다. 자동차 소비자 권익 개선에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1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인도된 지 1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2만km를 넘지 않은 새 차의 고장이 반복될 경우 자동차제작사가 이를 교환 또는 환불해주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원동기와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부위에서 똑같은 하자가 발생해 2번 이상 수리했는데도 문제가 또 발생한 경우 교환·환불 대상이 된다. 또 이처럼 주요 부위가 아닌 구조와 장치에서 똑같은 하자가 4번 발생하면 역시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주요 부위든 그렇지 않든, 1번만 수리했다더라도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을 넘는다면 역시 교환·환불 대상이다. 이런 하자가 발생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이하 자동차안전심의위)가 중재에 나서게 된다.

자동차 분야 전문가들(최대 50명)로 구성된 자동차안전심의위는 필요한 경우 자동차제조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성능시험을 통해 하자 유무를 밝혀낼 수 있다.

자동차안전심의위가 조사를 거쳐 내린 중재 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따라서 자동차제조사가 교환·환불을 해주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집행할 수도 있다.

/연합뉴스

車 생산·수출·내수 '트리플 크라운'

10월 판매 전년비 23.6%·생산 36%·수출 32.2% 증가

지난달 자동차 내수·수출·생산이 조업일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작년보다 크게 늘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0월 자동차 내수 판매는 작년 동기 대비 23.6% 증가한 16만881대로 집계됐다.

산업부는 조업일 증가와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영향으로 내수 판매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올해 10월은 추석 연휴가 긴 작년 10월보다 조업일이 5일 많았다.

국산차는 22.9% 증가한 13만8184대, 수입차는 27.6% 증가한 2만2697대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쉐타페와 K9 등의 신차 효과로 판매가 각각 25.0%, 22.9% 증가했다. 쌍용차도 렉스턴 스

포츠 인기가 힘입어 판매가 36.0% 늘었다. 한국GM은 말리부, 트랙스 판매 증가로 7.8% 늘었다.

수입차는 화제 여파로 BMW 판매가 감소했지만, 벤츠와 렉서스 등의 판매가 늘면서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 27.6% 증가했다.

수출은 조업일 증가와 대형 SUV 및 친환경차 수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작년 대비 32.2% 증가한 23만86대를 기록했다.

국내 자동차 생산은 조업일 증가와 내수·수출 회복 등의 영향으로 36.0% 증가한 38만1천595대를 기록했다. 올해 월별 최고 실적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70~50% 할인 이벤트

“불만족시 1달 안에 100% 환불”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옥상)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탑이 없는 평슬라브 주택은 갈라강판지붕공사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가능!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냉·난방비 절감효과!

스틸방수 및 지붕공사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H.010-9229-3530

특허정